

KCCI 브리프\_ESG\_제43호

# KCCI ESG NEWSLETTER

##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DEC. 2024

전문가 기고  
ESG의 죽음

ESG 주요 현안  
해외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국내외 주요 ESG 뉴스

ESG 주요 통계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대한상공회의소

## 전문가 기고

# ESG의 죽음

### 문철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ESG 죽음’의 종결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유력신문들은 트럼프 2기의 반 ESG 정책이 글로벌 ESG 쇠퇴를 급격히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9월 파이낸셜타임즈의 ‘ESG의 죽음 (ESG is dead)’ 특집 기사는 충격이었다. 한때 높아졌던 ESG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급감하고 ESG를 아무리 강조해도 온실가스배출량이 이전보다 오히려 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사망’ 진단이었다. 의무공시이든 민간자발 공시이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ESG 어젠다의 형태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역량미달이고, 대기업들의 마케팅 방식으로 전락하며, 결국 ESG라는 세 글자는 사라질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의 특집 기획(“Who killed ESG party?”)은 결론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ESG 죽음’의 종결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유력신문들은 트럼프 2기의 반 ESG 정책 (환경규제 축소, 바이든의 IRA 법안 폐기, 파리기후조약 탈퇴, 미 증권감독원의 기후공시규제 폐기)이 글로벌 ESG 쇠퇴를 급격히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ESG 공시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5개 주의 소송에 의해 이미 집행정지되어 있는 상장사의 온실가스배출 관련 정보의 의무공시 제도가 트럼프 정권에 의해 아예 고사될 것 (“die on the vine”)으로 예측하는 기사를 냈다 (24.11.07).

이러한 해외 ESG 경향의 중대 변화에 맞춰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또한 재조명할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미 민간에서는 ESG 축소 분위기를 체감하고 예산과 인력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문제는 정부 제도이다. 한 번 도입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궤변적 논리는 이제 영향력을 잃고 있다. 미국도 포기하는 ESG 의무공시제도를 우리가 굳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한국의 일인당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2위권이다. 우리 기업들은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구조적 한계를 갖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해외투자자에게 탄소배출성과와 목표 공시를 강제화하는 것이 국익과 우리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규제로 강제하자는 그간 움직임이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과 근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발행된 UN보고서<sup>1)</sup>는 글로벌하게 통일된 ESG 공시기준을 갖자는 이른바 글로벌 정합성이 달성하기에 어려운 목표라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주장하는 ISSB 기준이 실제로는 정보의 국가 내 작성방식과 범위 등이 상이하여 상호비교가 불가능하여 통일된 국제기준으로서 실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장 정량적인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비교 불가하다고 보았다. ESG공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후관련 공시의무화 제도의 실패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 부담과 방법론적 불안전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미국 25개 주의 규제 반대 소송의 핵심 논리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기업의 자율경영 영역에 속하는 데 이를 마치 회계정보를 허위공시한 경우와 동격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UNCTAD. (2024, August 27). Review of progress in harmoniz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ing, assurance and ethical considerations.

그렇다면 공시 규제 도입을 위한 방법론은 제대로 준비되었는가?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7월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업들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G7 Korea ESG 위원회의 조사 결과, 기업의 94.7%는 공개초안에 구체적인 기준과 객관적 방법론이 부족하여 작성 방법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압도적 다수의 기업은 공개초안에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고(91.2%), 공개초안을 원안 수용하여 의무화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7.2%). 특히 공개초안이 요구하는 재무영향 분석(76.2%), 시나리오 분석(80.2%), 스코프 3(84.3%), 연결 기준(69%), 제101호 정책 목적(89.5%) 등 핵심영역에서 대다수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유는 대부분 작성 기준이 불분명하고 공통의 검증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정확하게 산출된 정보들이 기업간 비교하기 어렵고 (시나리오 분석 경우, 94.8%), 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도 아니라고 기업들은 보고 있다 (스코프 3 배출, 89%; 재무영향 분석, 82.5%; 시나리오 분석, 77.3%). 소송, 제재 등 법적 리스크 또한 크다고 보았으며 (재무영향 분석, 87%; 스코프 3 배출, 86.6%), 공시 준비 비용이 과도하여 효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연결기준, 90.6%; 스코프 3 배출, 87.1%; 재무영향 분석, 85.5%; 시나리오 분석, 85.3%). 무엇보다도 정보 신뢰도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에 참여한 배출량 검증조사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스코프 3 배출량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혔으니(65.3% 동의), 이를 기반한 공시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공개초안에 대해 기업이 내준 성적표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방법론이 준비되지 않은 규제 도입은 대혼란으로 기업을 모는 격이다. 기업은 결국 외부 컨설팅기관에 준비 업무를 맡기게 되나, 글로벌하게 공통된 방법론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컨설팅기관은 무엇을 객관적 결과물로 제시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국내 모 대기업이 3개의 컨설팅 기관에 공개초안에서 요구되는 재무영향도 분석 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관마다 방법론이 모두 다르고 해당 방법론을 회사와 공유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다. 본인도 검증할 수도 없는 깜깜이 공시 정보를 담당자는 어떻게 대표이사과 이사회에 올려 결재를 받을 수 있을까? 법적 책임은 컨설팅기관이 아닌 기업에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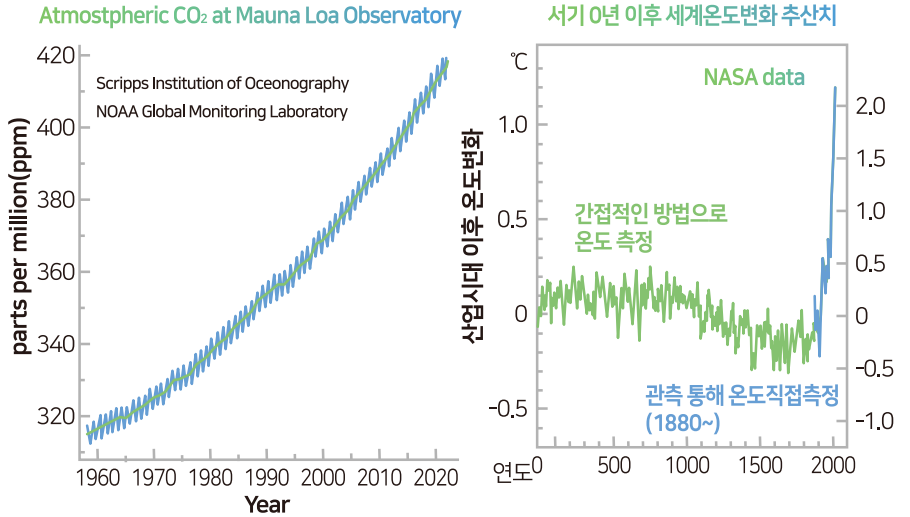
필자는 백퍼센트 지속가능성 찬성론자이다. 기업 생존과 우리 후세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지금 형태의 ESG 어젠다 추진 방식은 실패할 것으로 본다. 이미 실패했다고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는 숨을 고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시간이다. 해외에서 논의하는 대안들에 귀 기울이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숙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면 과감히 포기하고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지혜롭다. 정부는 ESG 의무화로 대형 먹거리 사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자칭 ESG 전문가 등 이익집단의 규제 찬성 주장보다 부담을 실제로 감내해야 하는 기업의 편에 서서 이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 해외 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

## 1.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의 증가

2024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몸으로 직접 겪은 여름이기도 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이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저 없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지난여름에는 잡초와 칠팔쿨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대기의 기온이 상승하고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광합성 작용이 활발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 그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 연도별로 나타낸 Keeling curve와 NASA가 측정한 서기 0년 이후의 세계 기온변화를 나타낸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958년 이후에 65년 동안 315ppm에서 420ppm으로 급격한 증가가 일어났고, 세계의 기온 변화는 0~19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로써 온실가스의 증가가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촉발시켰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 2. UN이 주도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를 1988년에 설립하고, 1992년에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기반으로 1955년부터 매년 'UNFCCC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며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 틀은 리우에서 준비되었으며, 1997년 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6종(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 PFC, SF<sub>6</sub>)을 지정하고, 이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5.2%를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 없이 보고의무만 부여됐다. 이때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한국 등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며 도쿄의정서가 발효(2005년)되기 전인 2001년에 미국이 탈퇴하고, 2011년에 캐나다, 2012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탈퇴하는 바람에 교토의정서는 위기를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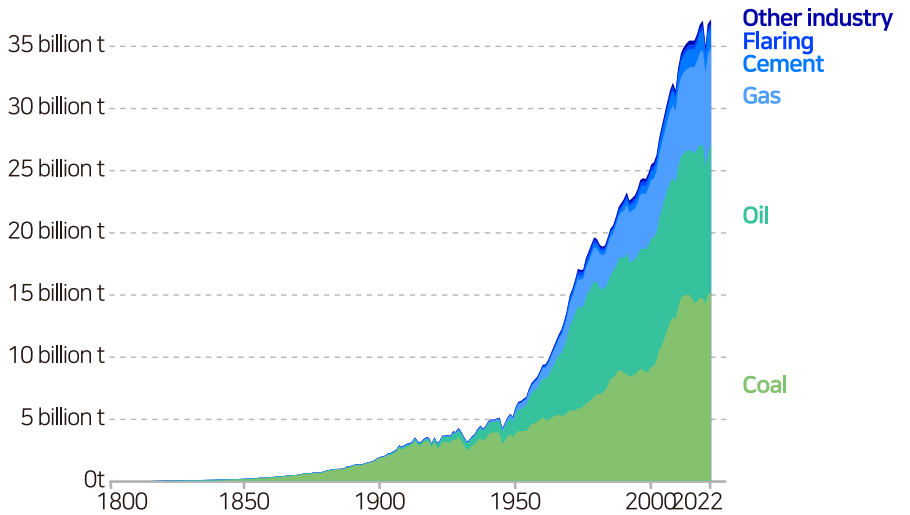


# 해외 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그런 와중에도 IPCC는 2006년도에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위한 각종 연료의 발열량, 배출 계수, 지구온난화지수(GWP) 등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여 공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자원연구소(WRI)와 지속가능발전세계기업협의회(WBCSD)는 NGO,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저탄소 경제 실현을 목표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GHG protocol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다.

2015년 COP21에서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자각하면서 지구의 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기온(14도) 대비 최대 2도 이내를 유지하도록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자는 협정을 한 것이다. 'NETZERO 2050'이 그 목표이다. 즉 2050년에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증가량이 0이 되도록 감축하자는 약속이다. 이를 앞당기겠다는 나라도 많다. NETZERO 2050, 즉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실행방법 중의 강력한 하나가 RE100이다.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100% 대체하자는 전략이다.

## CO<sub>2</sub> emissions by fuel or industry typ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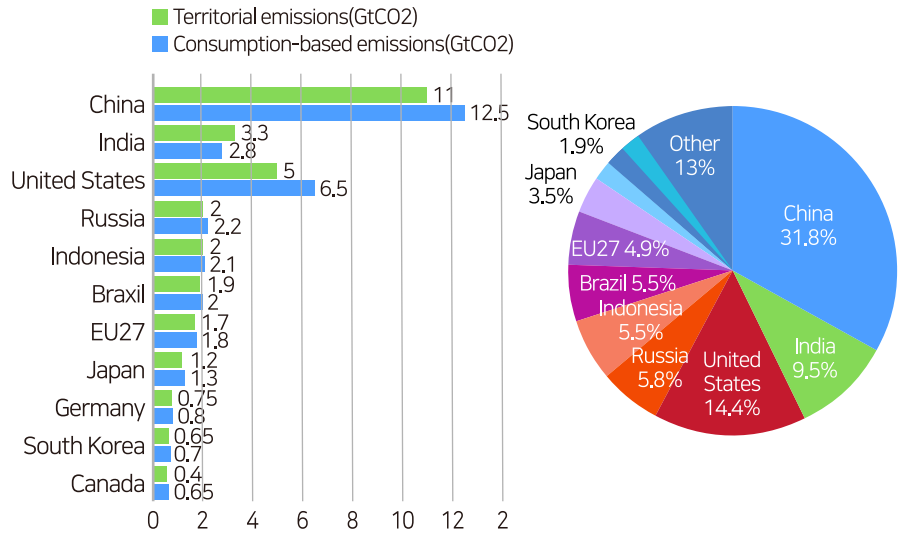
파리기후협정은 2016년도에 발효되었는데 미국이 2017년에 탈퇴를 하는 바람에 각국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탄소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200여개 국가는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2021년에 파리기후협정에 재 가입했다. 이로써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참하게 되었다.

### 3. 해외 주요국가의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2023년도 각 나라별 탄소배출량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EU27, 일본, 한국 순서로 정리된다. 이 중에서 중국, 미국, 인도, EU 4개국의 탄소배출량 측정현황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해외 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 Country -by-Country Breakdown of Global Carbon Emission for 2023



### 1) 중국의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중국의 탄소배출량 측정은 베이징에 있는 국무원 산하 생태환경부에서 주관하고 각 성급 생태환경부에서 협조한다. 중국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시 IPC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고유의 배출계수와 활동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IPCC 기본 값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탄소배출량 측정의 특징은 절대적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인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한다. 제3자 검증을 받는 것도 먼저 생태환경부 산하의 지방정부에서 기업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필요에 따라 제3자 검증을 요구할 때 받게 된다.

2027년까지 약 100개의 고 탄소배출 제품과 수출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측정 표준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탄소배출에 대한 통계 및 회계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국은 산업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산 표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 2) 미국의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미국의 탄소배출량 측정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주관한다. EPA는 매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92% 기업들은 GHG protocol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IPCC 가이드라인을 기본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다. UNFCCC와 파리협정에 보고하는 인벤토리를 작성할 때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 수 백 명의 전문가로부터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의 인벤토리는 삼불화질소도 포함하며 탄소흡수원도 함께 측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 해외 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

미국은 EPA와 농무부를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측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토양 탄소와 삼림 바이오매스를 모니터링하고, 산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추적하고 있으며,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방법론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

### 3) 인도의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인도의 탄소배출량 측정은 뉴델리에 있는 에너지효율국(BEE)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중앙 전력규제위원회와 환경산림기후변화부와 전력부에서 각각 탄소 크레딧 거래, 온실가스 배출량 고시, 탄소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인도 역시, IPCC 가이드라인을 기본 프레임워크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UNFCCC 및 파리협정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연료에 대한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농업에너지, 시멘트, 철강 등의 부문에서 산정된 탄소배출량 데이터가 아직은 불확실한 편이다.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합 데이터 관리 및 메타 레지스트리 구축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프로세스로의 전환, 탄소 배출량 측정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Tier 방법론을 도입하여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4) EU의 탄소배출량측정 현황과 과제

EU의 탄소배출량 측정은 코펜하겐에 소재한 유럽환경청(EEA)에서 주관하며, 유럽환경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인벤토리를 UNFCCC에 보고한다. 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후행동총국(DG CLIMA)에서 탄소 배출량거래제를 담당하며,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연합통계청에서 유럽의 모든 통계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는데 탄소배출량도 이들 데이터 중의 하나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탄소 시장으로,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규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U27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LULUCF) 부문의 탄소 흡수량을 계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건물과 도로운송부문의 별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속도를 가속화하고자 하며 회원국 간 격차 해소, 탄소 흡수원 강화, 녹색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향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 4. 결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파리협정 가입국가의 배출량 측정과 관리는 IPCC 가이드라인을 기본 프레임워크로 적용하고, 지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탄소정책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EDGAR에서 산정한 2023년도 전 세계 온실가스배출량은 53.0Gton으로서 2022년도 대비 1.9% 증가했다. 국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 E

### 환경



**“역행하는 한국 정부 기후재정...2022년 4.8조 → 2025년 3.7조”**

그리니엄 | 2024.10.24 <https://greenium.kr/news/58442/>

**UN, "현 기후정책 유지하면 2100년 지구 기온 3.1°C 상승"**

ESG경제 | 2024.10.25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8>

**환경부·국토부,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4곳 선정**

헤럴드경제 | 2024.10.31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1031050550&ACE\\_SEARCH=1](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1031050550&ACE_SEARCH=1)

**영국, 2027년 1월부터 CBAM 시행 공식 확정**

그리니엄 | 2024.11.05 <https://greenium.kr/news/58804/>

**지구 생명다양성 ‘빨간불’...야생동물 개체군 73% 급감**

한경ESG | 2024.1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42622i>

**저탄소 넘어 이젠 脫탄소로 환경경영 마인드가 경쟁력**

매일경제 | 2024.11.07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11162342>

**환경오염 줄이고 수소까지 만드는 '페테양광 재자원화' 기술 개발**

전자신문 | 2024.11.07 <https://www.etnews.com/20241107000026>

**트럼프 승리, 오스테드·베스타스 등 유럽 청정에너지 기업 직격탄...미국 시장도 출렁**

임팩트온 | 2024.11.08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4>

**블투명해진 '기후공시 의무화'...EU와도 불협화음 예고**

경향신문 | 2024.11.12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11122124035>

**COP29 첫날, 탄소배출권 거래 지침 승인**

세계일보 | 2024.11.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112515106?OutUrl=naver>

**동반위, 이마트와 협력사 ESG 지원 나서**

한경ESG | 2024.10.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33540i>

**대한항공, 지역사회 상생 위한 사회공헌...‘희망의 날개’ 편다**

매일경제 | 2024.10.24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49032>

**“셋째 낳으면 1억”...직원들 다닐 맛 난다는 통큰 이 회사, 어디야**

매일경제 | 2024.10.28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51745>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한국경제 | 2024.10.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96384i>

**지난해 기업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 161억...최근 5년 내 최고치**

매일경제 | 2024.11.03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57816>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지역 아동들과 싱가포르 해외 탐방**

한스경제 | 2024.11.05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384>

**해외 연기금 ESG 기준 높네...공시 최종기준 연내 발표 미뤄지나**

서울경제 | 2024.10.1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LS4QW0D>

**사모펀드, 지속가능성 영향력 확대...BCG 설문조사**

임팩트온 | 2024.10.25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06>

**“왜 이 등급이 나온거죠?” ESG 등급 발표 두고 와글와글**

더나은미래 | 2024.11.04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05401>

**中·싱가포르, 손잡고 녹색금융 新질서 만든다...연내 탄소노미 통합 계획**

임팩트온 | 2024.11.1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81>

**SK, 그룹 거버넌스체계 개편...이사회 역할 '업무 관리·감독'으로 재정의**

ESG경제 | 2024.11.11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3>

## S

### 사회



## G

### 지배구조





## 1. ESG 금융

###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78	279	289	290	283	291	292	300
사회적채권	1,531	1,526	1,554	1,577	1,609	1,618	1,659	1,689
지속가능채권	268	254	238	237	230	261	258	262

###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녹색채권	262	259	264	264	264	269	268	274
사회적채권	2,054	2,044	2,079	2,102	2,121	2,113	2,153	2,165
지속가능채권	184	177	171	171	167	166	166	168

자료: KRX 사회책임투자채권-통계-상장현황

## 2. ESG 평가

###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4.10.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61	202

###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4.10.31)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80	530

자료: KRX ESG 포털

## 3. 기타 통계

###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4.10)

\* CF100 참여 기업 수: 166개 ('24.10)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	-	-	6	14	27	36	36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26	433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 2024년 ESG 뉴스레터 발간 주제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및 문의처

\*지속가능경영원

1월	COP28 주요 결과와 시사점
2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과 활용
3월	ESG Digitalization과 데이터 통합관리
4월	미 SEC 기후 공시 규칙안과 영향 분석
5월	국내기업의 ESG위원회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6월	글로벌 인적 자본 공시 현황과 대응방안
7월	EU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8월	DEI 실천을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9월	KSSB 국내 ESG 공시제도 공개초안
10월	EU 순환경제 법안 동향과 대응전략
11월	<b>해외탄소배출량 측정 현황과 과제</b>
12월	글로벌 기업의 ESG 연결 공시 우수사례

권우혁 연구원 | E. whk@korcham.net

김예원 연구원 | E. kyw1208@korcham.net